

대학 모형 다양화의 문제점과 전망

박 정 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1. 대학 모형 다양화의 함의

교 육개혁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교육개혁안에서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대학 모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할 것을 주요 개혁과제로 확정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다시 각 대학이 대학 모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대학 모형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예시하고 있다.

① 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부과정 학생을 위해서 특정학과에 소속되지 않고 학생이 자유롭게 폭넓은 교육을 받게 하는 대학

② 사회가 요구하는 각 분야의 관리자를 위하여 몇 개의 학문분야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전공케 하는 대학

③ 특정 분야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전문교육에 치중하는 대학

④ 음악과 미술, 연주, 비평 등의 예술교육에 있어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⑤ 산업현장에 종사할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장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⑥ 학생은 학부 또는 학과에 소속되어 있으나, 전공이수학점을 최소화하여 다전공·복합학문연구가 가능한 대학

한편,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8일 열린 전국 총장회의에서 대학의 유형을 연구와 교육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교육과 산업중심대학으로 구분하고, 이 중 ‘교육과 산업중심대학’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교개위가 제시한 대학 모형과 교육부의 대학 모형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각

기관의 현실 인식의 편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먼저 교개위의 ③, ④번째 모형은 기존의 종합대학에서 이들 전문분야를 분리시켜 독자적인 대학으로 운영해 가자는 대학체제 개편의 구상 아래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존의 종합대학내의 음대, 미대, 체육대 등의 단과대 체제가 아닌 독자적인 음악학교, 미술학교, 체육학교 등으로의 개편 전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③번 모형에서는 법과대학의 로스쿨로의 전환 가능성을 담고 있다. ⑤번 모형은 기존의 전문대, 산업대, 개방대의 발전모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방향으로 체제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 모형이 특별한 방향제시라기보다는 각 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사용이 자유로워지는 데 따른 분류의 한 방편으로 보인다. ②번 모형은 현재 대학의 전공분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새로운 국제경쟁질서 속에서의 관리자 양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⑥번 모형에 통합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며 단순한 하나의 교육과정에 불과하다. 하나의 교육과정을 대학의 모형으로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모형으로 생각된다.

한편, 교육부의 모형 구분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각 고등교육기관들을 그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현재의 대학 중 약 10여 개 정도의 대학이 교수나 연구원 등 학자를 집중적으로 배출하고 있어 이를 연구-교육중심대학이라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다수의 대학은 교육-산업중심대학으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육부안은 기존의 대학 현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치열한 인식없이 적당히 상황을 넘어가고자 하는 안이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교개위안과 교육부안이 이처럼 차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안이 통합·조정되지 않고 있어 각 대학들은 도대체 어느 안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교육개혁 추진 일정에 따라 올해중(1995년)으로 각 대학이 자기 발전 모형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각 대학 입장에서는 일단 교육부의 모형 구분에 따라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야 정부(교육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모형을 확정·보고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부가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기본 모형들이 과연 교육개혁의 목표에 맞게 분류·설정되었는지 여부와, 시행시의 문제점 및 전망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2. 한국 대학의 파행과정과 다양화 논의의 출발

주지하다시피 대학 모형을 다양화하려는 논의의 출발점은 현실의 획일화된 교육체제를 다양화하고, 공급자 중심의 대학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으로 전환하며, 낙후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세계 일류화를 지향하며, WTO 체제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쟁질서로 돌입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대학교육의 문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학의 모형을 따라 다양화(?)된다고 해서 대학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겠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무래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개위의 현실인식은 다소간 구조적 인식 위에서 있는 반면, 교육부의 현실인식은 대학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교육이 낙후된 원인을 따져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현재의 대학교육이 왜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 되었는데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 대학교육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형성된 원인은 과도한 학력간 임금격차, 입사·승진 등에서의 차별에 따른 대학교육 수요의 팽창에 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입사원서도 낼 수 없고 승진에서도 누락되며, 임금지급에서의 비합리적 차별이 계속되어 사실상 전 국민을 대학으로 향하게 하였다.

이러한 대학 집중 현상은 초·중등교육을 입학원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학 자신도 낙후의 길을 걷게 했다. 대학간판만 걸어 놓으면 팔도강산에서 구름같이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경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대학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고,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을 적당히 모방하는 선에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각 대학의 교육목표도 그저 전 시용에 지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내걸려진 것이었다. 이 결과는 전국의 대다수 대학이 단지 그 규모만 다를 뿐 교과과정, 교육방법, 교수구성, 나아가 단과대학 구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외양을 갖추게 만들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고유한 영역을 지키지 않고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해 온 데는 경제성장 전략에 따른 기업의 요구와 함께 정부의 대학 정책도 큰 기여를 했다. 1950~60년대만 하더라도 ○○사범대학, ○○농과대학, ○○공과대학, ○○신학대학 등 고유하게 특성화된 영역을 지키는 대학들이 많았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진행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대졸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70~8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영역 구분은 없어지고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입학생의 수능시험 점수만 가지고 전국의 모든 대학을 1위부터 꼴찌까지 서열을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금이라도 서열이 앞선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간에 '입시지옥'으로 표현되는 이수라장이 전개되었다. 대학은 대학대

로 신입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유사학과를 임의로 신설해 대학원 과정에서나 가르칠 과목들을 학부과목으로 편성해 놓고 편협한 전공지식을 전수하여 관리자적 식견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들을 배출해 왔다. 그러나 WTO 출범에 의한 세계자본주의 시장의 재편과 이에 따른 국내자본들의 생산·유통시장 전략이 바뀌어지면서 대졸자에게 요구하는 자격도 동시에 바뀌게 되었다. 이상의 상황 변화가 대학개혁 요구로 나타난 것이며, 결코 대학 내부에서의 자기반성에 의한 개혁요구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다.

3. 모형 설정과 시행상의 문제점

이러한 시각에서 대학개혁의 문제를 볼 때,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다양화·특성화 논의는 본질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

첫째, 교육부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그리고 산업중심대학 중의 한 모형을 선택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이미 그런 식으로 각 대학이 분류되어 있다. 연구자와 학자를 배출하는 대학은 상위 서열의 소수 몇 대학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이고, 전문대와 개방대 등은 산업중심대학이지 않은가. 즉, 굳이 모형화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개혁안이 나왔다가 사라져가는 과정을 여러번 겪어온 교육부가 이번에도 교개위 안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자(필자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당히 대학을 모형화하여 교육개혁이라는 파고를 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둘째, 세 가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교육부의 강요(?)가 오히려 대학의 다양한 발전을 가로막는 획일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교육부는 또한 앞으로 다수의 대학교육 수요자

들이 산업중심대학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형을 선택하는 대학들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할 뿐더러, 산업중심대학이 대학교육의 중심적 대학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대학을 연구와 교육의 장이 아니라 기능인력 양성소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앞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정보·통신·생명과학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인데도 단순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발전방향과 배치되는 방향으로의 대학개혁이 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에 한국 대학은 또 다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마디로 세계자본주의 시장의 체제개편 방향과 그에 따른 한국 경제의 발전전략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으로의 교육개혁이라 하지만, 진짜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전 국민의 수요 패턴의 변화를 조사해 보았는지 의심스럽다.

셋째, 소수의 자신있는(?)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 모형을 선택할 것이 예상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기 모형을 확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못 된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업중심대학이라는 모형 구분은 대학의 수평적인 분류가 아니라 수직적 계층분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연구중심대학이 아닌 대학은 대학의 명예가 크게 훼손될 뿐더러 대입 지원자수가 격감하게 될 경우,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할 수도 없게 된다. 대입지원자들은 자기능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가장 상위·서열의 대학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고, 이 때 연구중심대학이 교육중심대학이나 산업중심대학보다 상위의 서열을 갖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식의 계층화 그리고 계층내에서의 서열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산업중심대학 및 교육중심대학은 지원자가 부족하여

학교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며, 반대로 연구중심대학은 계속 명문으로 남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입시지옥의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육개혁의 의미 자체를 반감시키고 말 것이다.(그래서 지방의 일부 국·공립대가 교육부의 의도에 맞지 않게 연구중심대학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각 대학이 스스로의 모형을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은 또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많은 대학들이 전문점(?)으로 출발하여 70~80년대를 거치면서 백화점(?)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진 구성이나 학과 편성이 모두 동질화되고 획일화되었다. 일단 비대해진 백화점을 단시일내에 전문점으로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혁명적인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은 '교육, 연구, 봉사'이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종합될 때 대학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난다. 교육부의 모형은 한 뿌리에서 나온 세 줄기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교육서비스를 완전한 일반상품으로 인식하여 그것이 가진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 그저 경쟁에서 살아 남는 자만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배경에 깔고 있다. 이래서는 다양한 건학이념을 가진 다양한 대학들이 존재할 수 없고, 이들이 동시에 내는 소리가 화음을 이루어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건강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대학을 특성화하고 '개별대학 안에서도 경쟁우위에 있는 학문계열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 대학이 단시일내에 대학 구성원들간의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4. 전망과 과제

교육부는 우리의 대학이 “획일적인 대학체제, 연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여건과 풍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학사운영, 효율적 대학운동을 방해하는 획일적 정부통제 등으로 대학의 질적 수준이 세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대학 모형을 다양화 특성화하도록 한다는 목적 아래 세 가지 대학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현실 진단에 거의 대부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제시한 세 가지 모형을 선택하는 것과 대학을 세계화시키는 것의 내적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중심대학으로의 계층하락이 이루어진다면 세계화되는 것인가? 여기에 더해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및 산업중심대학과 같은 대학 모형의 수직적 설정은 대학간 계층분화 현상을 초래해 초·중등학생과 학부모들을 입시지옥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는 없다. 이미 문제를 안은 채 비대해져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은 각 대학들에게 금년내로 각자의 모형을 확정하도록 일정이 짜여진 것 또한 대학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일방적으로 정한 추진계획에 따라 무리하게 모형을 설정하게 해서는 내부 구성원들간의 반목과 불신만 초래할 뿐 대학의 안정과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형 설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 명문대학에의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예상된다면, 기존의 서열화된 대학구조 속에서 수직적 계층화의 문제가 중첩될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중심, 교육중심 및 산업중심대학

이라는 모형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지역별로, 국·공·사립별로, 영역별로 수평적인 전문화를 통해 각 대학이 협조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모형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형은 각 대학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진정한 자율화의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단체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바이지만, 일부 부패한 사학들은 과감히 공립화하여 지역대학으로서의 공공성이 살아나게 해야 한다. 인천대가 시립대학이 된 이후 지역대학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상지대의 도립화 추진운동은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대학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공체계를 갖추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인력을 양성해 내며, 지역은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지역대학 모형이 앞으로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에게 매력있는 모형이 될 것이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강요하는 바에 따라서 대학 모형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추진성과에 의해 각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오히려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해 일차적으로 균등한 지원을 하고, 일정한 경과기간을 둔 후 고유한 대학 모형을 선택하여 발전해 가는 대학을 차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각 대학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학 구성원 전체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각자의 모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

박정원/건국대학교와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사회과학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이윤상승 인플레이션의 이론구조”, “교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외 다수를 발표했다.